

4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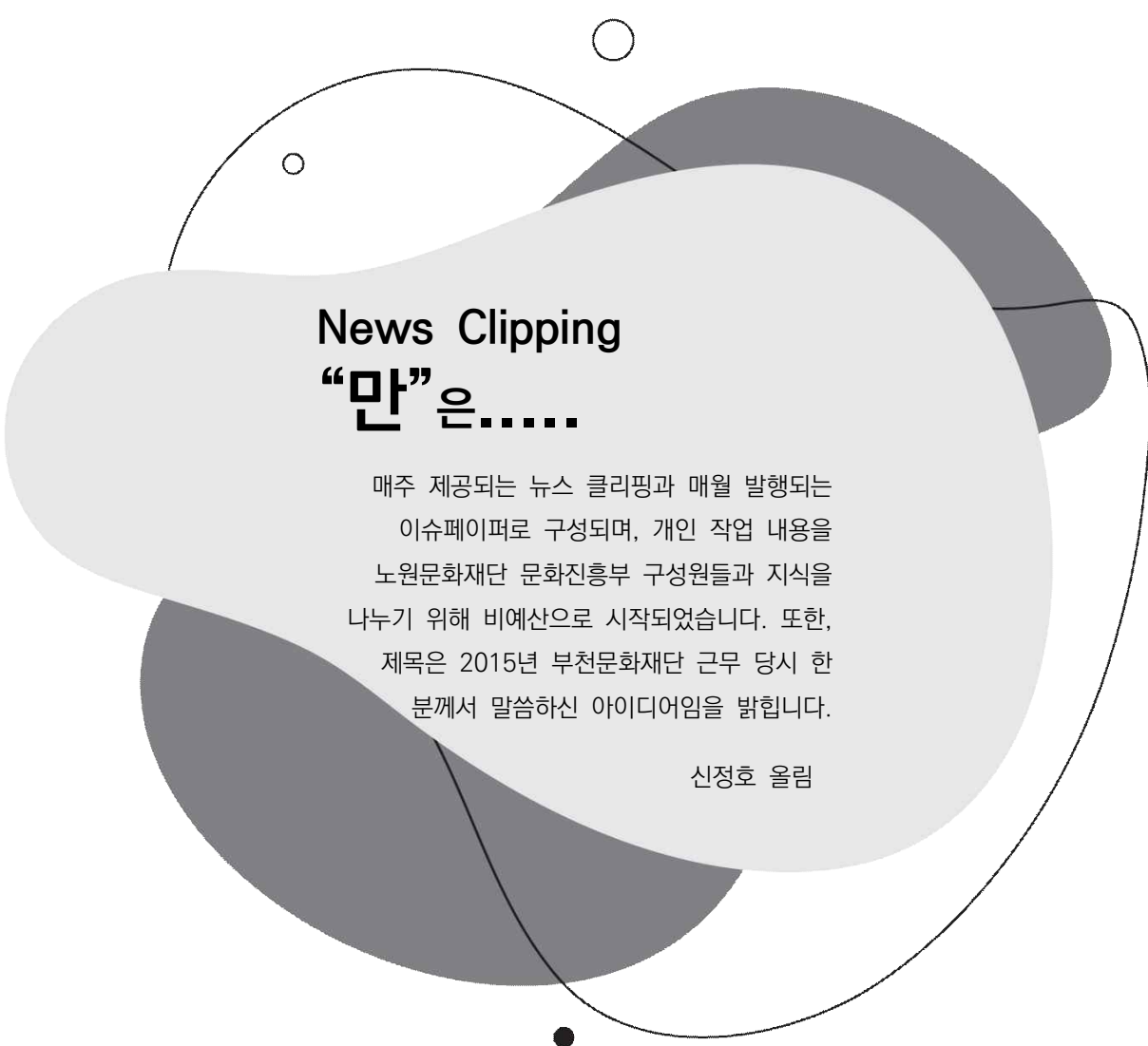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2026.03.23.

'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0000



News Clipping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개인 작업 내용을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2026년]

(제48호) 확장의 시대, 문화정책의 자립을 묻다 2

(제47호) 문화정책은 지금 ‘더 크게’ 가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과연 ‘더 오래’ 갈 준비는 되어 있는가 9

(제46호) 숫자는 커졌지만 삶은 더 풍요로워졌는가 16

(제45호) 확장의 시대를 넘어, 구조를 완성할 시간 23

(제44호) 속도는 빨라졌다고 하지만, 방향은 선명한가 30

(제43호) 성과를 소비하는 문화정책에서, 기반을 축적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37

(제42호) 성과 이후의 문화정책, 무엇을 재설계할 것인가 44

(제41호) 확산은 시작됐다는 확산, 그러나 지속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51

[2025년]

(제40호) 다양한 사회 변화 신호 속에서 드러나는 지속가능성의 조건 56

(제39호) 예산 확대의 시대에서 생태 전환의 시대로 58

(제38호)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은 재정 구조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61

(제37호) AI에 쏠린 국가, 문화와 돌봄은 어디로 가는가 66

(제36호) 문화균형발전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 71

(제35호) 균형 잃은 문화정책, 지속 가능한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다시 묻다 76

(제34호) 균형과 지속가능성의 재정립 80

(제33호) 지역이 무너진 문화정책, 균형과 공정으로 다시 세워야 84

(제32호) 문화재정 긴축과 공공성 약화 속 문화 생태계 위기 89

(제31호) 재정·인구·문화 위기 속 지역성과 공동체 중심 문화정책·산업 혁신 필요 93

(제30호) 한류 성과에도 지속성 위기, 격차·연대 부족 속 균형 문화정책 요구 98

(제29호) 문화산업 확장 속 재정위기·운영 불투명·저작권 보호 등 지속가능성 과제 102

(제28호) 문화·경제·사회 전반에서 경쟁력 강화·격차 해소·지속가능 발전·포용적 문화 확산 106

(제27호) 정부 조직 개편·K컬처 확산·지역재생·AI·복지 강화 등 미래 대응 위한 정책 전환 본격화 110

(제26호) 지방문화 재정·제도 강화, K-컬처 확산·창작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추구 115

(제25호) 한국 문화예술 정책과 산업 구조의 전환기	120
(제24호) K컬처 300조 목표는 재정·인프라 부족과 예술인 지원 미흡으로 공허한 구호될 위험	124
(제23호) 한류 성장과 문화산업 활황 속 사회통합·지속가능성 도전	128
(제22호) 문화권리 확대와 지역균형, 창작 생태계 전환을 위한 문화정책 재구조화	132
(제21호) 한국 사회의 다층적 도전과 문화·도시 재생의 전환점	136
(제20호) 문화·예술·기술 융합과 지역 활성화 속 예산 효율·공공성·지속가능성 강화 요구 증가	140
(제19호) 문화예술 예산 갈등과 사회문제 심화 속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문화 혁신 필요	144
(제18호) 공공·문화·지역의 균형 발전과 포용사회 전환 위한 재정·제도 혁신 본격화	148
(제17호) 재정 위기 속 지역소멸 대응과 문화 분권 실현 간 균형 과제	152
(제16호) 지역문화재단 확산 속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정부 정책 연계	156
(제15호) 사회적 포용과 지역 균형발전, 창의적 자립 기반 구축	160
(제14호) 기후위기·지역 균형·문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	164
(제13호) 대선 문화정책 한계 속 경기침체·청년불안·고령사회·AI·문화재생 부각	168
(제12호) 자립을 넘어 공동체 연립, 지역문화 확산과 공공문화 이슈 대두	171
(제11호) 사회 변화 속 문화예술, 글로벌 진출과 지역 활성화 모색	174
(제10호)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문화 인프라 확충, AI·예술 융합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 전환	177
(제09호) 문화예산 감소, 인구 소멸 우려 속 공연·전시 해외 호평	180
(제08호) AI의 등장과 21대 대선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182
(제07호)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방안 모색	185
(제06호) 티켓 플레이션 우려 속 공연시장 성장, 국제 미술시장 위축, 1인 가구 증가로 문화복지 고민 깊어지는 지자체	187
(제05호) 초 개인화·AI 확산·경제 위기 속에서 역할 재정립과 지속가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받는 문화예술계	190
(제04호)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교육·예술 복지 강화와 공간 활용, 축제 예산 문제 등 논의	192
(제03호)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문화재단, 신뢰와 지속가능성 자기 고민 필요	194
(제02호) ‘문화변화’에 직면하게 있는 지역문화 예술계	196
(제01호) ‘문화한국 2035’ 발표 속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및 제도 개편 추진, 그러나 재정난으로 축제 중단 위기	198

(제48호)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요약 정리

■ 핵심 키워드

구분	키워드	의미	구분	키워드	의미
구조	지원체계 개편	예술인 지원 확대 vs 전달 구조 불신	시장	미술·콘텐츠 산업화	신고제·금융지원·블루칩 집중
권리	예술인 권리보장	신고제·직권조사 등 제도 강화	확장	K-콘텐츠 글로벌화	공연·투어·경제효과 확대
격차	산업 내 불균형	대형사 집중·프리랜서 불안정	기술	AI 창작환경 변화	생산성↑ vs 저작권 기준 재정립
제도	예술활동증명	승인을 저하·제도 신뢰 위기	공간	문화인프라 확대	복합시설·K-아레나 경쟁
운영	재단 구조 문제	직접지원 부족·조직 비대화	전환	체류형 문화소비	관람 → 체류·경험 중심 이동

■ 핵심 쟁점

- ① 지원 확대에도 체감되지 않는 예술인 안전망 → 지원 규모보다 제도 신뢰와 접근성이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예술활동준비금 확대 등 지원은 늘었지만, 예술활동증명 혼선과 전달 구조 불신으로 현장 체감도는 낮음
- ② 산업 성장과 예술인 권리 보장 의 불균형 → 산업 성과가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
 - K-콘텐츠와 공연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프리랜서·중소기획사·장애예술인 등은 여전히 차별과 소득 불안에 놓임
- ③ 지역문화 확장 속 생태계 자생력 약화 → 양적 확대와 지역 생태계 축적 사이의 괴리 심화
 - 재단과 지자체 사업은 늘지만 직영·단기성과 중심 구조로 지역 예술단체의 성장 경로와 자생력이 약해짐
- ④ 인프라·축제 중심 확장과 운영 내실의 부족 → ‘짓는 것’은 늘었지만 ‘남기는 것’은 부족한 상황
 - 복합문화시설, K-아레나, 축제는 확대되지만 체류·소비·콘텐츠 운영 구조는 취약
- ⑤ AI·기후·격차 심화 속 문화정책의 역할 재정립 → 문화정책의 범위와 책임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전환기
 - AI 창작환경 변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삶의 질 하락 등으로 문화정책이 산업정책을 넘어 교육·복지·지역정책과 결합 필요

■ 정책적 시사점

이번 주 문화동향은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된다. **“문화정책은 확장 국면에 진입했지만, 구조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 정책은 산업을 키우고, 공간을 늘리고,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권리는 뒤쳐지고, 지역은 약화되며 생태계는 얇아지고 있다.

구분	주요 시사점	구분	주요 시사점
“지원 규모 → 전달 구조”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단계 축소 직접지원 비율 확대 • 디지털 기반 투명 집행 시스템 필요 	“중앙 → 지역 생태계”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우대장기 계약 공개제안 확대 • 로컬 창작자 중심 구조 전환
산업 성장 → 권리 보장”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권리법 실효성 강화 • 프리랜서·스태프 보호 체계 구축 	“AI 도입 → 저작권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활용 가이드라인 • 인간 창작 기여 기준 명확화
“공정성 → 성장 시스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중심 → 피드백·육성형 구조 • 단계별 성장 트랙 설계 필요 	“산업 → 삶의 질 정책”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책 = 복지·돌봄·교육 결합 • 웰다잉·고령사회 대응 포함
“시설 → 운영·콘텐츠” 중심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공급 과잉 대비 • 제작·유통·레퍼토리 체계 강화 	“관람 → 체류형 경제” 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소비 연계 모델 고도화 • 지역 상권·콘텐츠 결합 전략 필요

지금의 문화정책은 확장에는 성공했지만, 자립을 만드는 구조 설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제48호) 확장의 시대, 문화정책의 자립을 묻다

문화정책은 예술인 지원 확대와 K-콘텐츠 성장, 문화인프라 확충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체계의 불투명성, 권리 보호 미흡, 지역 생태계 악화 등 구조적 한계도 동시에 드러난다. 산업 성과 중심 정책을 넘어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구조 전환이 요구된다.

○ 예술인 지원체계 정비와 창작안전망 강화

- **李 “문화예술 지원하면 회장들이 중간에 해먹어”**(조선일보, 2026. 03. 15.)
 - 이재명 대통령 3월 15일 창원 간담회에서 **문화예술 지원금의 중간착복·분절 집행 우려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
- 예술인 1만8천명에 300만원 지원...‘예술활동준비금’ 신청 받는다(뉴시스, 2026. 03. 20.)
 - 예술인 1.8만명에 300만원 지원...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확대, 재외국민 포함·장애예술인 우선 선발

○ 예술인 창작기반 제도 개선과 실무 역량 강화

- 10명 중 7명이 ‘미승인’... 예술인 혼란 주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TF 출범(여성신문, 2026. 03. 13.)
 - 예술활동증명 승인율 50% 미만·2024년 미승인 68.3%로 기준 논란 확산·문화부 제도개선 TF 출범 및 시스템·인력 보완 추진
- 문화예술인 프랜차이즈 위한 실선 서무 가이드·금천문화재단·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예술인 대상 ‘실선 서무 특강’ 연다(한국강사신문, 2026. 03. 16.)
 - 금천문화재단 예술인 대상 세무·계약·저작권 등 실무 중심 역량강화 교육 운영

○ 예술인 권리보호 강화와 산업 내 불균형 해소

- 이기현 등 10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발생사실 인지한 살마도 신고할 수 있어야”(전국매일신문, 2026. 03. 19.)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주체를 확대하고, 정부 직권조사 근거를 마련해 권리보호 실효성 강화하는 법안 발의
- 문화연대 “BTS 광화문 공연 환호 뒤 가려진 것들 봐야”(한겨레, 2026. 03. 19.)
 - 대중문화 매출 15조 성장에도 대형사 집중...중소·프리랜서는 소득불안 지속

○ 장애예술인 차별 해소와 예술적 동등성 확보

- 장애예술인들, 서울연극협회 인권위 진정 “장애인 연극, 복지 아닌 ‘예술’”(비마이너, 2026. 03. 19.)
 - 장애예술인 10명 ‘장애인 연극은 비전문’ 발언에 인권위 진정...차별금지법 위반 논란 속 제도 개선 요구

○ 국가 검열 책임 인정과 예술 표현의 자유 회복

- ‘국립극단 검열 사태’ 피해 예술가에 국가 배상 확정(국민일보, 2026. 03. 16.)
 - 13년 국립극단 ‘구름’ 검열 피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 2,500만원을 확정하고,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 공정성 중심 지원의 한계와 창작생태계 정체

- 공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멈췄습니다(서울문화투데이, 2026. 03. 18.)
 - 공정성 중심 심의 강화에도 예술 성장·피드백 부재로 창작 생태계 정체

○ 문화기관 운영구조 개선과 공공성·투명성 강화 과제

- 전당과 통합하며 몸집 불린 전주문화재단, 통합 시너지 어디에?(전북일보, 2026. 03. 16.)
 - 전주문화재단 169억 중 예술가 직접 지원 1.3%에 그쳐...통합 후 조직 비대화·사업 중복 등 실효성 논란
- “성과는 커졌는데, 지역은 자랐나”...김명환 대표가 짚은 금천 문화정책의 빈칸(마을신문 금천in, 2026. 03. 20.)
 - 재단 직영·단기성과 구조로 지역예술 자생력 약화...공개제안·지역우대·육성형계약 등 제도 전환 필요
- 이재명 대통령 “채용 공고에 왜 월급이 안 보이냐”(위키트리, 2026. 03. 19.)
 - 채용공고 임금 비공개 개선...산업별 표준임금 공개로 노동시장 투명성 강화

○ 문화예술 투자 다변화와 민자사업 확대 필요

- “민자 신사업 범주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도 포함해야”(MTN 뉴스, 2026. 03. 18.)
 - 정부 100조 민자사업에 문화·콘텐츠 포함 요구...잠실팝시티(5000석) 등 공연장 투자 확대 기대

○ 미술시장 성장과 제도화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 문체부 “신고제, 미술산업 활성화 위해 필요…안정적 관리에 최선”(서울경제, 2026. 03. 13.)
 - 문체부 미술진흥법 시행(7월) 앞두고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도입 및 437억 규모 용자 보증 신설로 시장 투명성 산업화 추진
- 울산 갤러리, BAMA 참여 2배 늘었다…지역 미술계 존재감 확대(울산매일UTV, 2026. 03. 16.)
 - 울산 갤러리 3→6곳(2배), BAMA 136개·4,000점 규모 속 지역 미술시장 확장 가시화
- 3400억에 낙찰된 클림트…블루칩만 팔렸다(서울경제, 2026. 03. 17.)
 - 글로벌 미술시장 596억달러로 4% 반등…초고가·블루칩 중심 거래, 한국은 6% 성장

○ K-콘텐츠 글로벌 성과와 공연·투어 산업 확장

- '케데헌', 美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2관왕'…객석 응원봉 등장도(노컷뉴스, 2026. 03. 16.)
 - 넷플릭스 애니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장편애니·주제가상 수상하며 2관왕 달성
- 헌트릭스 '골든' 공연장 데창?…"넷플릭스, 내년 '케데헌' 투어 계획"(뉴시스, 2026. 03. 19.)
 - 넷플릭스가 '케데헌' 글로벌 투어를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1만~2만석 아레나 공연이 검토

○ 콘텐츠 중심 문화경제 확장과 산업 간 파급효과 강화

- 1시간 짜리 BTS 광화문 공연 “1.5조+a’경제효과(아시아경제, 2026. 03. 19.)
 - BTS 광화문 공연에 26만명 운집 예상, 숙박·교통·굿즈 소비 포함 경제효과가 최대 1조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
- 콘텐츠, K-푸드도 키운다…수출 10% 늘면, 농식품 생산액 1660억 ↑(뉴시스, 2026. 03. 18.)
 - 콘텐츠 생산 10억↑시 전체 17.6억·농식품 0.8억 증가…수출 10%↑시 생산 3.8조·농식품 1660억 확대

○ AI 확산에 따른 창작환경 변화와 저작권 기준 재정립

- "한 컷에 2시간 걸리던 작업을 10분만에"…AI 시대 웹툰 창작 현장은(아이뉴스24, 2026. 03. 16.)
 - AI 활용으로 웹툰 제작 속도 최대 6배↑(2시간→10분)…창작 효율 높이되 저작권 기준 중요
-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 AI 생성 작품 저작권 분쟁 상고 기각(특허뉴스, 2026. 03. 16.)
 - 미 연방대법원, 'Thaler v. Perlmutter' 상고 기각…인간 개입 없는 AI 창작물은 저작권 불인정 원칙 유지
- 전주문화재단, 직원 전원 AI 활용지도사 1급 취득(투데이안, 2026. 03. 17.)
 - 군장대 RISE사업단 협력 생성형 AI 실무교육 연계, 직원 15명 전원 자격 취득

○ AI·알고리즘 시대의 취향 형성과 큐레이션 역할 변화

- 취향은 누가 만드는가 - 얼굴 없는 큐레이터의 시대(서울문화투데이, 2026. 03. 13.)
 - AI·알고리즘 시대에도 큐레이터는 사라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취향을 설계하며 인간 큐레이터의 신뢰 역할이 더 중요

○ 복합문화시설 확충과 도시재생 연계 문화인프라 구축

- 박물관·미술관 등 복합문화예술공간, 인천뮤지엄파크 첫 삽… 2028년 개관(조선일보, 2026. 03. 16.)
 - 인천뮤지엄파크 총사업비 2,416억 투입해 착공…박물관·미술관 결합 복합문화공간으로 2028년 개관 목표
- 대전시, 원도심·예술 결합 '3대 특화 문화시설' 청사진 공개(중부매일, 2026. 03. 17.)
 - 대전시 원도심에 3대 문화시설 조성…98억·158억 투입, 전시·문학·도예 거점 구축 통한 도시재생 추진

○ 대형 공연 인프라 확대와 K-컬처 거점 경쟁 심화

- 광명시, K-아레나 유치 밀그림 그리기 시작(일간경기, 2026. 03. 16.)
 - 광명시 5만석 규모 K-아레나 유치 추진…10월 타당성·기본계획 수립 통해 글로벌 공연·관광 거점 조성 본격화
- '도시 속 섬' 영도, 해양신산업·관광특구로 탈바꿈한다(프레시안, 2026. 03. 19.)
 - 영도에 5000억원 투입 2만석 K-POP 아레나 조성, 관광특구·트랩 구축으로 외국인 1000만명 관광 거점화 추진
- 고양 'K-컬처밸리' 소송전 격화…경기도 3134억원 맞소송(포스트저널2026. 03. 17.)
 - 고양 K-컬처밸리 5,000억 소송 vs 3,134억 맞소송…공정률 17%·완공 2030년 지연

○ 문화기관 독립성 확보와 운영 자율성 강화 필요

- 경기도박물관, '직속 기관' 독립 정체성 세워야(인천일보, 2026. 03. 15.)
 - 경기도박물관 문화재단 산하 편입 이후 연구·전시 자율성 악화 지적…직속기관 전환 통한 독립 운영 필요성 제기

○ K-컬처 기반 도시브랜딩과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 DDP앞 'K팝 거리'...동대문 일대 'K컬처 핫플'로 만든다(한국경제신문, 2026. 03. 16.)
 - 서울 동대문 DDP 일대 K팝 거리 조성...26개 사업·2031년 목표, 문화·관광·상권 결합 추진
- '서울' 글로벌 도시 경쟁력 33계단 "깁충"...비결은?(재외동포신문, 2026. 03. 15.)
 - 서울 K-컬처·사계절 축제 기반 도시매력으로 세계 도시 경쟁력 9위 도약...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위상 강화
- 부산은 영화·축제 도시로 도약하는데 대구는?... '수성못 수상공연장'이 필요한 이유(경북매일, 2026. 03. 16.)
 - 대구 부산 대비 상징적 문화공간 부족 지적...수성못 수상공연장 통해 관광·공연 결합 문화거점 필요

○ 체류형 문화소비 확대와 경험 기반 관광전환

- 고양시 "공연을 관광·소비로 확장"(매일경제, 2026. 03. 19.)
 - 고양시 공연 관람객을 관광·소비로 연결하는 '고양콘서트' 추진...뷰티·미식 연계 체류형 코스 확대
- "1시간 줄 서도 본다"...'울트라백화점 서울 Vol.2', 흥행 돌풍에 연장 결정(뉴스1, 2026. 03. 16.)
 - 체험형·서브컬처 기반 전시 흥행으로 관람형을 넘어 참여·교류형 콘텐츠 수요 확대 및 체류형 문화 소비 강화

○ 유희공간의 문화적 재생과 창작공간 전환

- 신촌 백화점 쉬는 날, 지하 주차장은 록 공연장이 됐다(서울신문, 2026. 03. 19.)
 - 서대문구 현대백화점과 협업해 신촌 백화점 쉬는 날 지하주차장을 공연장으로 바꾸고, 청년 인디음악 생태계 확장에 나서

○ 로컬콘텐츠 기반 지역문화정책과 산업생태계 구축

- '로컬100'에 없는 원주, 어떻게 할 건가?(원주투데이, 2026. 03. 16.)
 - 원주 로컬100 미선정 배경은 문화자원 부족이 아닌 '도시 서사 부재'...분산된 자원을 통합한 문화브랜딩 필요
- 전북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신규 지정 추진...문화콘텐츠 창작·제작 인프라 확충(전라신문, 2026. 03. 16.)
 - 전북 전주·익산·군산·남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신규 지정 추진...200억 펀드 등으로 창작·기업·산업화 연계 생태계 구축

○ 산업유산 기반 문화재생과 산업·예술 연계 플랫폼 확대

- 이재명 대통령 "국가산단-문화예술 연계 플랫폼 청와대서 고민할 것"(노컷뉴스, 2026. 03. 16.)
 - 이 대통령 15일 창원 차담회에서 1년 단위 예술지원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산단-문화예술 연계 플랫폼을 청와대가 검토
- 영암군, 옛 대동공장 폐산업시설 복합문화공간 재생(중도일보, 2026. 03. 19.)
 - 1만515㎡ 부지, 총사업비 226억 투입...농산물 가공·레스토랑·커뮤니티·예술아플리에 조성

○ 섬·해양 기반 광역문화벨트 구축과 연계형 문화전략 확대

- '연대형·세계지향' 섬 문화 프로젝트...서남해안 트리엔날레 추진 본격화(공뉴스, 2026. 03. 16.)
 - 서남해안 5개 지자체 2030 'W.I.N. 트리엔날레' 추진 협력...섬·예술·관광 결합한 광역 문화벨트 구축 본격화

○ 지역공연 생태계 취약성과 시장 구조 불균형 심화

- 인천서 공연할 때 '인천이라 미안해' 탄식... "지역문화 수요 확장해야"(인천투데이, 2026. 03. 16.)
 - 인천 예술인 "서울 안 가면 생존 어렵다" 인식 확산, 문화 인프라·수요 부족으로 지역이 인재 유출 구조에 머무르며 지역 문화시장 형성 필요
-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지원금 반납 사태, 한국 오페라 생태계의 위기...(MOVE, 2026. 03. 18.)
 -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내부 갈등 끝 1억 지원금 반납...민간 오페라 제작·지원 구조 위기 드러내

○ 제작극장 기능 강화와 지역브랜드 공연 창출

- 의정부문화재단, 대형 창작 뮤지컬 「시작, The Beginning」 제작 발표회 성료(인천투데이, 2026. 03. 16.)
 - 의정부문화재단 창작뮤지컬 '시작' 제작 발표...조선 건국 서사 담아 10월 초연·지역문화 브랜드화 추진

○ 미래관객 육성 기반 부족과 레퍼토리 체계 미비

- ① 미래 관객은 어떻게 길러지는가(MOVE, 2026. 03. 19.)
 - 한국 어린이·청소년 공연은 증가했지만 대부분 실험 단계에 머물고, 국립단체 간 연계·장기 레퍼토리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

○ 축제 양적 확대 속 체류·소비·지역연계 한계 노출

- 서울시, 365일 축제 끊이지 않은 '편 서울' 브랜딩(매일일보, 2026. 03. 16.)
 - 서울시 '365일 축제도시' 전략으로 한강 중심 사계절 축제 확대...관광·체류·경제 연계해 글로벌 Top5 도시 도약 추진
- '무늬만 글로벌이었던' 유등축제, 진짜 글로벌화 시동(부산일보, 2026. 03. 16.)

- 진주남강유등축제 외국인 비중 0.3% 한계 속 '글로벌 축제 재산정·3년간 24억 지원으로 체류형·해외마케팅 중심 전면 개편
- 경남 지역축제 손님 늘었지만 지갑 안 열었다(경남신문, 2026. 03. 17.)
 - 경남 축제 66→109개·방문객 63%↑에도 1인 소비 1.2만→7007원 43%↓
- 경주시, '경주문화예술 르네상스' 예산낭비 논란(시사코리아저널, 2026. 03. 16.)
 - 경주시 '문화예술 르네상스' 연 7억 투입에도 가수 섭외비 2억↑·지역예술인 배제 논란으로 예산효율성 문제 제기

○ 기후위기 대응과 축제 운영 패러다임 전환 요구

- 새별오름 앞에 5년 만에 살아난 불씨…들불축제는 생태축제일까(한겨레, 2026. 03. 16.)
 - 제주들불축제, 예산 17억원 들여 5년 만에 불놀이 재개했지만 산불·생태훼손 우려 속 달집 1개만 태워 논란
- 종잡을 수 없는 개화에…지자체들 벚꽃축제 일정 늘리고 늦추고(연합뉴스, 2026. 03. 18.)
 - 기후변화로 개화 불확실…제천 4.4~19(3일↑), 보은 3→10일 확대, 충주 20일 늦춰 개최
- 창원진동미더덕축제, 3년 연속 취소된 것은 기후 위기이자 미래의 문제이다! (진주인터넷뉴스, 2026. 03. 09.)
 - 미더덕 생산 2,690톤→136톤 급감, 고수온 영향…축제 3년 연속 취소
- 문대림 "변화의 물결 제주들불축제, 사계절 축제로 확장"(제주의소리, 2026. 03. 14.)
 - 제주도지사 도전하는 문대림 코로나 전 30만명 방문 들불축제, 봄·가을 각 3개월 사계절 예술축제로 확대 제안
- 기후변화로 "활동 부족→건강악화→연 50만명 조기 사망" 전망(한겨레, 2026. 03. 18.)
 - 기후변화로 신체활동 감소, 건강 악화…2050년 연 50만명 조기사망 전망

○ 문화예술교육 확대 속 접근성·격차·기반 과제 부각

- [한국의 평생교육] (13)평생교육 내용(V): 문화예술교육(교육플러스, 2026. 03. 18.)
 - 문화예술교육, 1980년 헌법·1999년 평생교육법 기반…수요자 맞춤·강사 안정·지역격차 해소 필요
- 음악·미술 재능 뛰어난 청소년 '예술영재 교육' 지원…300명 모집(내손안에서울, 2026. 03. 16.)
 - 서울 예술영재 300명(음악 180·미술 120) 선발해 교육비 전액 지원…취약계층 예술교육 확대
- 국내 첫 '예술 특수학교'…'접근성' 숙제(KBS뉴스, 2026. 03. 17.)
 - 총 474억 투입 예술 특수학교 추진…중·고 21학급 138명 규모, 접근성 과제

○ 문해력 저하 심화와 교육 대응 필요성 부각

- 학생들 "금일이 금요일?"…문해력 논란 커지자 국교위 '문해력 특위' 만든다(뉴스1, 2026. 03. 16.)
 - 학생 문해력 저하 심화에 교사 91.8% 체감…국교위, 원인 분석·교육 대안 마련 위한 '문해력 특위' 신설

○ 생활문화 기반 확대와 시민 참여형 문화생태계 구축

- 부천문화재단, 공공 악기 대여 서비스 '부천 악기 은행' 30일 개소(기호일보, 2026. 03. 17.)
 - '부천 악기은행' 개소 20종 200여 대 악기 대여·기증 순환으로 시민 음악 참여 확대

○ 예체능 수요 확대와 취향 기반 생활문화 시장 성장

-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참여와 혁신, 2026. 03. 12.)
 - 예체능 사교육 비중 6.2%, 참여율 25.7%로 모두 증가하며 음악·미술·체육 전반 수요 확대
- 할머니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2030 폭 빠진 취미 정체(한국경제신문사, 2026. 03. 13.)
 - 뜨개 카페 이용 105%↑, 20·30대 60% 이상…아날로그 취미의 공간·콘텐츠 결합으로 신시장 확장

○ 지방소멸 심화와 정주 기반 취약성 구조적 문제 부각

- 방치된 '지방소멸의 그늘'… 시·도별 예산은 최대 100배 격차(세계일보, 2026. 03. 15.)
 - 빈집 문제, 시·도 예산 최대 100배 격차·법령 이원화로 비효율…지방소멸 악순환 심화
- 29만호 vs 1675호… '따로국밥'식 빈집 통계에 대책도 걸돈다(세계일보, 2026. 03. 16.)
 - 빈집 통계가 기관별로 최대 172배 차이나 실태 파악부터 혼선…국가 차원의 통합 기준·관리체계 구축 필요
- "지방소멸 막으려면 주민 주도의 부가가치 창출부터 이뤄야"(서울경제, 2026. 03. 19.)
 - 지역소멸 해법은 주민 주도 부가가치 창출…3·6·9·20년 장기 전략 필요
- "지방 간 청년 3명 중 1명, 2년 못 버티고 수도권 'U턴'"(연합뉴스, 2026. 03. 18.)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34.9%가 평균 1.6년 만에 수도권으로 돌아가며, 정착률은 수도권 42.7% vs 비수도권 21.3%로 격차 큼

○ 창업 생존율 저하와 공유경제 기반 일자리 전환 흐름

- "창업기업 10개 중 7개 망해…" 통계로 보는 한국 창업 생존율(일요서울, 2026. 03. 18.)
 - 창업기업 1년 생존 62%→5년 30%…10곳 중 7곳 폐업, 자영업 중심 구조·투자 부족 문제

- "공유가 곧 경쟁력"...광명시 공간·물건·재능 나누는 기업 키운다(머니투데이, 2026. 03. 17.)
 - 광명시 공유기업 공모 추진...7년 미만 기업 대상 최대 500만원 지원, 4월 최종 선정
- 2026년 2월 고용동향 및 평가(고용노동부, 2026. 03. 18.)
 - 고용보험 1563만명, 서비스업 26.9만↑...예술·여가 16.7만명·6.1천↑

○ 동체 기반 문화모델 확산과 지역 자산화 실험

- 숫자의 시대를 넘어, 삶의 존엄을 '채비'하다(은평시민신문, 2026. 03. 16.)
 - 은평채비사업단 수익 공동분배 모델 도입해 공동체 기반 문화활동 실험
- 주민 이야기로 지역 살린다...전북 마을문학 공모 착수(전라매일, 2026. 03. 19.)
 - 인구감소지역 6개 마을·단체 2곳 선정, 총 2.5억 지원...마을문학 자산화 추진

○ 삶의 질 하락과 자산 불평등에 따른 행복 격차 심화

-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불행?"...한국 행복 지수 전 세계 67위로 '뚝'(아시아경제, 2026. 03. 19.)
 - 한국 행복지수 6.040점으로 147개국 중 67위, 3년간 52→58→67위 하락...관용·부패인식 취약이 주요 원인
- 계층 이동의 꿈 접는 불평등한 나라, 한국(참여와 혁신, 2026. 03. 14.)
 - 한국 자산 상위 10%가 46.1% 점유...소득보다 자산 불평등·계층 대물림 심화
- "부모 세대보다 삶이 나아졌다" 53%...10년 전보다 확 줄었다(매일경제, 2026. 03. 19.)
 - 삶의 질 '개선' 53.2%로 10년 전 대비 11.7%p↓, 청년은 40.3%만 긍정·47.9% 미래 비관·시로 청년 일자리 21만개 감소

○ 정신건강 '보편 인식-낮은 치료 이용' 구조적 격차

-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 정신건강 문제 보편적이지만 치료는 부담(여론속의 여론, 2026. 03. 17.)
 - 정신건강 경험 66%, 보편 인식 97%지만 치료 26%...미치료 이유 심각성 낮음 42%, 자가해결 27%

○ 6.3 지방선거 앞두고 문화도시·생활문화·공간재생 공약 경쟁 확대

- 박관열 경기광주시장 예비후보 "초대형 쇼핑센터 말고 생활문화 공간을"(오마이뉴스, 2026. 03. 16.)
 - 박관열 예비후보, 5호 공약으로 3만호 AI신도시와 연계한 역세권 개방형 생활문화거리·팝업상권 조성 제시
- 성현출, "인권·기술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남구"(쿠키뉴스, 2026. 03. 15.)
 - 성현출 예비후보 100억 문화재단 설립·문화예술 6차산업으로 1500억 경제효과 창출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남구' 공약 제시
- 한옥문 후보, 휴업영화관 '문화예술공간 활용' 약속(양산뉴스파크, 2026. 03. 17.)
 - 휴업 영화관을 공연·전시공간으로 재활용해 문화인프라 구축과 상권 활성화를 추진
- 박용선, 생활예술 중심 문화도시 공약 발표(프레시안, 2026. 03. 18.)
 - 포항시장 후보 생활예술 지원 확대·29개 읍면동 합창단·유희공간 활용 등 문화도시 공약 제시
- 이춘희 예비후보 "세종, 워싱턴D.C.형 국가문화수도"(더팩트, 2026. 03. 18.)
 - 세종 국립박물관·예술단 유치·지원 2배 확대...공실 상가 활용 '국가문화수도' 공약
- 조청래 창원시장 예비후보, '영혼'을 깨우는 문화 대개조 공약(BreakNews, 2026. 03. 18.)
 - 창원 문화재단 개편·관광기구 신설, 2028 시립미술관 등 인프라 확충·도시 전역 문화관광화 추진

ISSUE

웰다잉 확산과 존엄한 노후를 위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

※ "삶의 마무리를 나눔으로" 배우 신애라 부친, '엔딩파티' 후 아파트 기부(국민일보, 2026.01.18.)

- '엔딩파티' 계기로 신애라 가족, 아파트 기부...삶의 마무리를 나눔으로 확장한 사례

- "삶의 마지막도 존엄하게" 장경술 의원, 웰다잉 지원 체계 마련 촉구(경기일보, 2026. 03. 12.)
 - 안양시의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찾아가는 교육·캠페인 등 '웰다잉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 강복구, 스스로 가꾸는 존엄한 삶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news A, 2026. 03. 13.)
 - 강복구 연 12회 프로그램·의향서 1,020명 등록 기반 웰다잉 교육 확대...존엄한 노후 준비 지원
- "병원 대신 살던 집에서"...안산시, 초고령사회 '존엄한 노후'의 이정표 세우다(일요신문, 2026. 03. 12.)
 - 안산시 방문의료·복지 결합한 통합돌봄으로 '집에서 존엄한 노후' 실현하는 지역 케어 모델 구축

(한주를 정리하며) 확장의 시대, 문화정책의 자립을 묻다

이번 한 주 문화동향을 보면, 지금의 문화정책은 분명 확장의 국면에 들어서 있다. 예술인 지원 확대, K-콘텐츠의 세계적인 성과, 복합문화시설과 대형 공연장 건립, 체류형 관광과 도시브랜딩, 로컬콘텐츠 육성과 산업유산 재생까지 문화는 이제 산업·도시·복지·관광·교육을 묶는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한국 문화정책은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화려하다.

하지만 이번 주 자료들이 함께 보여준 것은, 그 확장의 속도만큼 구조의 균형과 내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인 지원은 늘고 있지만, 지원 체계의 불투명성과 중간 집행 구조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예술활동준비금 확대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예술활동증명 미승인 비율과 현장 실무교육 필요성은 제도가 창작자의 현실을 아직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원은 확대됐지만, 창작자가 체감하는 안정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권리 문제도 분명하다. K-콘텐츠 산업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중소 기획사와 프리랜서, 장애예술인은 여전히 차별과 불안정의 경계에 놓여 있다. 서울연극협회 논란,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범위 확대 법안, 국립극단 검열 국가배상 판결은 모두 같은 질문으로 모인다. 산업은 커졌는데, 예술인의 권리와 존엄은 그만큼 성장했는가. 이번 주 문화동향의 가장 무거운 쟁점이 여기에 있다.

문화기관과 지역문화정책의 과제도 또렷하다. 전주문화재단의 직접지원 비율 논란, 금천 사례에서 드러난 재단 직영·단기성과 구조 비판은 지역문화 행정이 양적 성과 관리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지역 예술생태계의 자생력과 축적 구조를 만드는 데는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축제 분야에서도 반복된다. 방문객은 늘었지만 소비는 줄고, 글로벌화를 말하지만 외국인 비중은 낮으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도 지역예술인은 배제되는 모순이 드러난다. 결국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동시에 산업과 도시 전략 측면에서는 새로운 흐름도 뚜렷하다. K-팝 거리, K-아레나, 뮤지엄파크, 원도심 특화시설, 산업유산 재생, 섬·해양 광역문화벨트, 공연 연계 체류형 관광코스 등은 문화가 이제 '보는 것'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는 도시 이미지를 장식하는 요소가 아니라 관광·상권·교통·생활양식까지 재편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확장이 모두에게 고르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 공연시장의 취약, 미래관광 기반의 미비,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 격차, 문해력 저하, 예체능 수요의 계층화, 지방소멸과 청년 유출, 자산 불평등과 행복지수 하락은 문화정책이 산업적 성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일깨운다. 문화는 결국 삶의 기반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번 주 자료 중 '웰다잉'과 존엄한 노후를 다룬 흐름은 상징적이다. 문화정책이 더 이상 공연장과 축제,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기에 때문이다. 삶의 질, 돌봄, 공동체, 존엄, 참여는 앞으로 문화정책이 비켜갈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이다.

정리하면, 이번 한 주 문화동향은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한국 문화정책은 지금 더 크게 나아가고 있지만, 더 오래 버틸 구조는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산업은 커지고, 공간은 늘고, 계획은 화려해지고 있다. 그러나 예술인의 권리, 지역의 자생력, 공공기관의 운영 철학, 미래관광 육성, 기후위기 대응, 삶의 격차 문제까지 함께 다루지 않는다면 이 확장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화정책은 '얼마나 많이 했는가'보다 '무엇이 남는가'를 물어야 한다. 지원의 규모보다 전달 구조를, 방문객 수보다 체류와 관계를, 시설 건립보다 운영과 생태계를, 산업 성과보다 권리와 존엄을 중심에 놓을 때 지금의 확장은 비로소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한 주의 소식을 정리하며,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지금의 문화정책은 자립을 만드는가, 의존을 만드는가?